

‘협상테이블’ 사라진 21대 국회 민주당 “원구성 행동 돌입할 때”

범여권 초선의원 53명 기자회견
“정부·여당 견제, 총선 불복행위 반대위한 반대 아닌 협치 전환을”

21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여야 간 협상 테이블이 사라진 모습이다.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본회의까지 여야 원 구성 합의안을 만들라’고 호소하는 것은 공염불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의 원 구성 협상 결렬 선언에 대해 ‘15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단독 본회의 개최’를 선언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한 가운데 “더는 기다릴 수 없다. 국민이 민주당에 부여한 다수당의 책무를 다할 때”라며 “내일(15일)은 원 구성을 위해 행동에 돌입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당을 겨냥해 “민주당이 대폭 양보한 합의안을 거부하고 정쟁을 선택했다”고 비판한 뒤 박병석 의장에게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절차는 지킬 만큼 지켰다. 반드시 21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도록 의장의 과감한 결단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초선의원 53명도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15일 본회의에서 전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대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정부·여당을 견제하겠다는 주장은 21대 국회도 동물 국회, 식물국회로 만들겠다는 총선불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여야 원구성 합의 불발로 미래통합당이 불참했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5일 상임위원장 선거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복 행위”라고 비판한 뒤 “(통합당이) 과거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닌 협치의 자세로 전환하길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통합당의 경우 주호영 원내대표가 밝힌 “추가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12일 “더 이상 (원 구성을 위해 여당과) 추가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통합당 3선 의원들도 같은 날 “통합당에 대한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통합당 3선 의원 일동은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놓겠다”고 배수진을 친 바 있다.

민주당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국도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통합당 몫으로 제안한 이후 나온 메시지다. 통합당에서 요구한 ‘법사위원장 배분’이 관철되지 않자 원 구성 추가 협상을 거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

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에 대해 “국민의 국회를 능멸하는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입장변화 없이 협상은 절대 재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사수’를 주장하는 데 대해 “여당이 법사위를 장악해야만 하는 진짜 이유가 유재수 검찰 무마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작 등 권력형 비리를 엄호하기 위함이란 해석이 분분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박 의장은 앞서 12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원 구성 협상) 타결을 기대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감”이라며 “여야 합의를 마지막으로 촉구하기 위해 3일간 시간을 드리겠다. 1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대로 단독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싸우자는 北, 눈치만보남



문영철 기자의
국방 칼럼

최근 북한이 군사행동 등을 예고하며 연이어 이빨에 힘을 주고 있다. 물기 직전의 개마냥 한판 싸우자는 북한인데, 우리 군은 제대로 된 군사적 조언마저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가만히 눈치만 보다가는 진짜 싸움이 날지도 모른다. 1938년 영국 체임벌린 수상이 독일 히틀러 총통과 ‘우리 시대의 평화선언’을 선언한 뮌헨협정을 맺고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진 것처럼 말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4일 김영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우리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정착 및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김영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밝힌 것처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9.19 군사합의’는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 그런데 군사라는 힘의 합이는 역설적으로 양측의 팽팽한 긴장감을 필요로 한다. 장전된 총을 겨누고 대치한 군인들이 먼저 총을 내려놓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북한은 지난달 3일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14.5mm 기관총(대공)을 국군 GP를 향해 발사했다. 유엔군

사령부는 같은달 26일 북한의 GP 사격과 국군의 대응사격 모두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지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런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북한군의 14.5mm 기관총 발사는 ‘우발적 사고’라는 식으로 언론에 전달했다. 우리측 KR6(K6의 원격조정형)기관총의 성능고장의 이유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GP총격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는데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는 대북지원안들을 꺼냈다. 지난달 27일 통일부는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를 통해 올해부터 6년 간 490만 달러(6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초안에는 한국 기업의 북한 활동 뿐만 아니라, 북한 기업의 한국 내 경제활동 보장을 담았다.

북한이 지난 4일 탈북단체의 심리전패라 살포에 불편한 심기를 보이자 통일부는 4시간 만에 ‘대북전단 중단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국방부 관계자가 대북전단은 9.19합의상 ‘기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는 보도도 나왔다.

탈북단체의 패라살포는 9.19 군사합의에 벗어난 행동일 수 있다. 내용도 북한뿐만 아니라 진보 정부의 전직 대통령까지 욕보이고 있어 적절치 않다. 그렇다해도 군을 비롯한 정부 당국이 북쪽이 날린 ‘선빵(먼저 상대를 때리는 것)’에 놀라,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대응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푸르름이 짙어지는 녹음기 6월(한국전쟁 70주기)이다. 침투하기 좋은 계절이다. 더욱이 국군은 코로나 대응에 한참이라 올해 동원예비군 훈련은 사실상 전부 취소될 상황이다. 싸움을 막고 싶다면 적어도 ‘너도 다쳐’라는 위협은 보여주자.

/captinm@

내달 무급휴직 지원금 전체기업 확대

고용부, 사업장 제출 계획서 접수
1인당 월 50만원, 최대 15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로 무급휴직할 경우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7월부터 전체 기업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제출하는 무급휴직 계획서를 15일부터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안정 특별대책 중 하나로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치지 않아도 유급휴직 1개월 이상만 하면 지원금 대상이다.

정부는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한해 지난 4월 말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관련 법규 개



지난 10일 중구 모두투어 사무실. 휴직 중인 직원 책상에 부채중 달력이 놓여 있다. 모두투어는 코로나19로 유급휴직과 무급휴직을 병행 중이다. 임원은 급여를 최대 70% 반납했다.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을 거쳐 이번에 전체 업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하고,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을 지급받는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용수 기자 hys@

환경호르몬 기준치 40배 수입학용품 적발·반입차단

환경호르몬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입 학용품이 적발됐다. 다행히 통관단계에서 적발돼 국내 유통은 차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어린이 제품의 수입 통관 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 70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안전관리 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이 39개 모델 50만점으로 가장 많았고, 완구 99개 모델 17만점, 어린이놀이기구 8개 모델 1만점 순으로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학용품 중 ‘얼큰이지우 개 연필세트 B’, ‘퍼니필통’ 등은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보다 40배, 200배 높게 검출돼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 조치됐다.

이번 수입 어린이제품 집중검사 결과 적발비율은 전년도(40.6%)보다 2.6% 감소했으며, 적발된 유형은 KC인증 미필, 허위표시 및 표시사항위반이 전체 적발의 98.0%를 차지했다.

/한용수 기자

산업부, 수소경제 육성펀드 340억 조성

오늘 펀드위탁 운용사 선정 공고

340억원 규모의 초기기업 육성펀드가 조성된다. 정부의 수소경제 및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펀드의 운용사인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주)이 ‘수소경제 및 e-산업 초기기업 육성펀드’(수소경제 육성펀드) 조성을 위해 15일 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을 공고한다고 14일 발표했다.

2016년부터 조성돼 운영중인 에너지산업펀드는 한전과 미래에셋이 출자한 총 5050억원 규모로, 직접투자 3535억원(70%), 간접투자 1515억원(30%)이다. 이 중 간접투자 재원 중 1250억원은 지난 2017년 11월 3개 펀드 위탁운용사를 선정해 운용 중이다.

이번에 펀드 위탁 운용사를 선정하는 수소경제 육성펀드는 에너지산업펀드의 하위펀드로서 간접 투자 재원 289억원에 민간·정책자금 최소 51억원을 매칭



지난달 28일 문을 연 서울 강동구 소재 수소충전소 모습 /연합뉴스

해 340억원 이상으로 결정된다.

펀드에는 수소경제 연관 산업 분야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 등 에너지산업 분야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될 계획이다. 투자기간은 펀드결성일로부터 4년 이내 존속기간은 10년 이내다.

관련 산업 분야로는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경제산업 관련, 수소의 제조·포집·정제·저장·운반·충전·연료전지 등 수소 공급과 이용과 관련된 형태의 비즈니스군이다. /한용수 기자